

## 92% “광우병 파문 ‘졸속 협상’ 때문”

광주일보 인터넷패널 여론조사

“미국산 쇠고기 안 먹겠다” 98%

광주·전남 여론 주도층 10명 중 9명 이상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 파문’이 ‘정부의 졸속 협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쇠고기의 안전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98%가 사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3·4·7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8일 본보 인터넷 패널 483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356명의 응답을 취합·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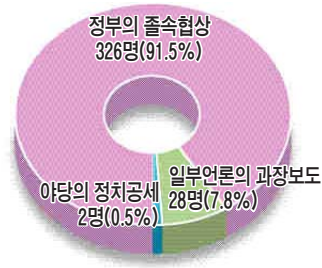
따라서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내용 수정 없이 오는 15일 예정대로 확정 고시되고, 이달말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 재개되게 되면 광우병 우려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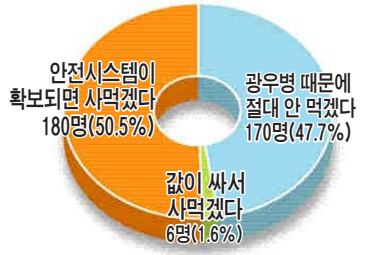
여론 주도층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 파문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1.5%가 ‘정부의 졸속 협상 때문’이라고 답했다. 극소수가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7.8%), ‘야당의 정치 공세’(0.5%)가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겠느냐’는 물음에는 50.5%가 ‘광우병 안전시스템이 확보되면 사먹겠다’며 재협상을 희망했고, ‘광우병이 염려되므로 절대 안 먹겠다’는 응답도 47.7%나 돼 현재 조건과 같은 미국산 쇠

■ ‘광우병 우려 파문’의 책임은?



■ 미국 쇠고기 수입되면?



고기의 수입에 대해 98.2%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값이 싸므로 사먹겠다’는 응

답은 1.6%에 불과했다. 여론 주도층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10대들에 대해서는 76.4%가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정당한 요구지만 방법이 지나치다”는 18.5%, “정치적 선동에 의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5.0%에 그쳤다.

답은 1.6%에 불과했다.

여론 주도층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10대들에 대해서는 76.4%가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정당한 요구지만 방법이 지나치다”는 18.5%, “정치적 선동에 의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5.0%에 그쳤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신부님의 합장 부처님 오신날(12일)을 앞두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김희중(오른쪽·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 위원장이 8일 순천 선암사를 방문,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왼쪽)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날 김 주교는 교황청을 대신해 전 세계 불교공동체에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는 태고종 총무원 교류협력실장 범현 스님. /위지람기자 jrvi@kwangju.co.kr

## 혁신도시, 정부 규탄 궐기대회

전국 14개 지자체, ‘재검토 반발’ 연대투쟁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궐기대회 갖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8일 오후 김

천에서 신정훈 나주시장 등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갖고 ▲공기업 민영화와 무관하게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효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혁신도시 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전기관

축소 시 정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서울에서 혁신도시 일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에 정부를 규탄하는 시·도별 전국 동시다발 궐기대회를 갖는 등 전국 국회의원모임, 각 시도 혁신협의회, 지방분권 운동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미 쇠고기 대책 ‘오락가락’

대통령·총리·장관 등 입장 달라 국민 혼란 가중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재협상 등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협상 관계자 등의 말이 서로 다르고 당정간에도 입장차가 커 ‘윗선에서는 불을 끄고 아래서는 불을

지피는 꼴이다’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해 왔으며,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8일 “재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느냐”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재협상을 시사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

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 전이라도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상황 변화에 따라 재협상 또는 개정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장관과 협상 대표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어 위기를 그때그때 모면해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만이 전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달러 = 1,049원

2년 6개월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째 급등하면서 1,050원에 육박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0원대로 급등했다.

<관련기사 11면>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3.50원 폭등한 1,049.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달 28일 이후 7거래일간 53.50원 급등하면서 증가 기준으로 2005년 10월25일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1,04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 11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고유가와 주가 약세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형 정유사의 결제 수요가 몰렸고 역외세력도 달러화 매수에 가담했다. /연형뉴스

## 목포~울산 ‘선벨트 경제권’

정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

목포와 순천·여수·광양을 거쳐 하동·남해·사천·부산·울산을 잇는 남해안 벨트를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우는 선·벨트(Sun-Belt)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남해안을 ▲목포권 ▲부산권 ▲남중경제자유구역(순천·여수·광양·사천·남해·하동군) 등 3개 거점으로 분류,

공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 등을 집중 육성하는 선·벨트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권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등의 육성을 위한 기존의 ‘J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2012년 여수 엑스포 기반시설이 건설된다. 남중경제자유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세계 혜택이 부여되며, 첨단 산업과 관광·의료·교육 산업이 육성된다. 여기에 중앙 정부와 전남·경남도 등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외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권 등을 갖는 ‘남중경제자유지역’이 설립된다.

앞서 지난 6일 광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조선경제포럼에서 “선·벨트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구도를 수도권과 선벨트권의 1대1 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아름다운... 56...  
문의전화: 061-383-8283  
전남 담양군 담양읍 김산로 160-1번지